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에는 ‘상속’과 ‘증여’가 있다. 상속은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했을 때, 증여는 재산을 주는 이가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상속과 증여에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각각 ㉢상속세, ㉣증여세라 한다. 이는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고,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서이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주는 이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받는 이가 결정되고, 재산을 받는 이가 세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재산을 물려주는 이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상속 의지를 알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자녀, 손자와 같은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조카, 백부모, 숙부모와 같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배우자의 경우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배우자는 1, 2순위자가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1, 2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단, 임신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

상속과 증여에 항상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공제 제도가 있어서 상속과 증여가 그 금액 이하에서 이루어지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제 금액은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공제 후에 남은 총액이 같으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상속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높은 비율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폐단이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여와 상속 모두 재산을 준 후 10년이 지나야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0년 이내의 기간에 동일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 기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재산정한다.

세금을 재산정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세 2억 원 아파트를 주면서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자.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아파트도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으로 올랐다 해서 3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시점의 가격인 2억 원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 방계혈족: 직계혈족을 중심으로 옆으로 갈라진 혈족

27. 밑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의 무상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어떠한가
-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방식을 중심으로
- ②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부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중심으로
- ③ 세금의 공평 부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공평한 사례를 중심으로
- ④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세금의 부과 대상과 적용 세율을 중심으로
- ⑤ 세금의 본질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28.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한 이후 부과된다.
- ② ㉣은 ㉠과 달리 납부 의무자의 우선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 ③ ㉠, ㉣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다.
- ④ ㉠, ㉣ 모두 적용된 세율이 높으면 공제 후 남은 금액이 크다는 의미이다.
- ⑤ ㉠, ㉣ 모두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는 데 기여한다.

2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씨는 가족으로 임신한 아내와 홀어머니가 있다. 그는 유언 없이 사망했다. 그에게는 토지와 예금이 있었는데, 죽기 5년 전에 당시의 시세에 따라 토지를 아내에게 증여하여 세금을 납부한 상황이다.

- ① 민법에 따라 A씨의 아내와 태아가 공동 상속인이 되겠군.
- ② 토지와 예금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겠군.
- ③ A씨의 아내가 이미 증여받은 토지도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겠군.
- ④ A씨의 아내가 임신한 상황이 아니라면, 홀어머니에게도 상속권이 있겠군.
- ⑤ A씨의 아내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현재의 시세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군.

30. ㉠ ~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 ② ㉡: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 ③ ㉢: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④ ㉣: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씬.
- ⑤ ㉤: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현상.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즉, 세금은 정부가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나 기업의 소득을 가져가는 부(富)의 강제 이전(移轉)인 것이다.

납세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정 활동, 즉 각종 공공 시설, 보건 의료, 복지 및 후생 등의 편익에 대해서 더 큰 혜택을 원한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 혁명이나 민중 봉기 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과도한 세금 징수도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에도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여 어떤 재정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별로 혜택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납세 거부 운동을 펼치거나 정치적 선택으로 조세 저항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원활한 재정 활동을 위한 조세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평과 효율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공평의 원칙이란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효율의 원칙이란 정부가 효율적인 제도로 세금을 과세해야 하며 납세자들로부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징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세 원칙을 설명하려 할 때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상 콜베르의 주장을 대표적으로 인용한다. 콜베르는 가장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은 거위의 털을 뽑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즉, ㉢거위가 소리를 가장 적게 지르게 하면서 털을 가장 많이 뽑는 것이 가장 훌륭한 조세 원칙이라는 것이다.

거위의 깃털을 뽑는 과정에서 거위를 함부로 다루면 거위는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 버릴 것이다. 동일한 세금을 거두더라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어떤 거위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깃털

을 뽑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용 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나 현금 카드 제도 등도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이다.

더불어 거위 각각의 상태를 감안하여 깃털을 뽑아야 한다. 만일 약하고 병든 거위에게서 건강한 거위와 동일한 수의 깃털을 뽑게 되면 약하고 병든 거위들의 불평·불만이 생길 것이다. 더 나아가 거위의 깃털을 무리하게 뽑을 경우 거위는 죽고 결국에는 깃털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7. 위 글을 바탕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기 위해 안내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주 제 : ㉠
 ▷ 주 최 : ○○ 고등학교 학생회
 ▷ 장 소 : ○○ 고등학교 3층 대회의실
 ▷ 일 시 : 2007년 6월 ○일

- ①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
- ② 납세자의 올바른 자세
- ③ 효율적인 정부의 구조
- ④ 세금의 정확한 의미
- ⑤ 납세 의무의 역사

18. 위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납세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 ①
- 대다수의 국민들은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함. ②
- 무리한 세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를 모두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함. ③
- 정부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함. ④
- 공평의 조세 원칙에 따르면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함. ⑤

19. <보기>의 관점에서 ㉡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정부의 재정 활동에서 세입과 세출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 만일 국민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시기에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다면, 이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여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① 자유주의 경제 아래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 ② 정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③ 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생활 보호, 의료비, 연금 등의 사회 보장 분야에 써야 한다.
- ④ 한 나라의 경제가 착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운영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 ⑤ 정부는 사전에 필요한 경비를 정확히 예측하여 필요한 만큼만 세금을 걷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 의미 관계가 ㉢ : ㉣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 ② 관객이 늘어남에 따라 크기가 점차 대형화되었다.
- ③ 자전거 타이어는 여름에 팽창하고 겨울에 수축한다.
- ④ 먼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먼저 수리해야 한다.
- ⑤ 얇게 뜯은 김은 부드럽고 맛이 좋아서 높은 값에 팔린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 불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 조세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자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도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데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이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과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와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편익 원칙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조세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뉜다.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하기도 한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 세금도 같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제 제도를 통해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 편익: 편리하고 유익함.
* 공공재: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두 입장을 비교, 분석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 ② 대상을 기준에 따라 구분한 뒤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개념을 그와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다.
- ④ 통념을 반박하며 대상이 가진 속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발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 ② ㉡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은 ㉡과 달리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 ④ ㉡은 ㉠과 달리 조세 부과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조세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건이다.

33. <보기>는 경제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한 학생을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보기 >

선생님: 여러분, 아래 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A, B, C의 세금 공제 내역을 가정한 것입니다. 표를 보고 조세의 공평성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각자 분석해 볼까요?

구분	소득 (만 원)	세율 (%)	공제액 (만 원)	납부액 (만 원)	공제 항목
A	3,000	5	0	150	공제 없음
B	3,000	5	100	50	부양가족 2인
C	4,000	10	100	300	부양가족 2인

성근: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이 약화되고 있어요. ㄱ

수지: B가 A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것은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것이네요. ㄴ

현욱: B와 C의 납부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편익 원칙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에요. ㄷ

유미: B의 세율이 5%이고, C의 세율이 10%인 것은 수직적 공평을 위한 누진세가 적용된 결과겠네요. ㄹ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조세 부담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온 것은 사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조세 부담률, 즉 조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수준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 중 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다 쓴다는 것을 뜻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수준에서 이것도 너무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 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활동 영역을 좀 더 넓혀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① 남아 있고, 그렇다면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조세는 정부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조세는 단순한 수입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이때 조세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남겨 줌으로써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경제 안정을 위해 거둬들이는 세금의 크기를 조정하다 보면 정부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지는 것이 보통인데, 여러 해 동안 계속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국채의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채 발행액의 증가는 나중에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정 없이 국채를 찍어내기는 힘들다. 현대의 정부 중에는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너무 많은 국채가 발행된 나머지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나아가 조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세를 부과한다든가, 오염물질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나아가 법인세제도를 활용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16.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의 기능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기준에 따라 논의 대상을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의 변화 양상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 있다.
- ④ 용어의 어원을 밝히면서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17.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② 조세부담률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조세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오늘날 많이 확대되었다.
- ④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이 미흡하다.
- ⑤ 조세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18.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가별 조세부담률(%)

연도 국가	1980	1990	2000	2010
A	25	28	30	35
B	47	52	58	61
C	20	16	13	11
D	52	51	51	52
E	30	30	30	24

- ① A 국가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있군.
- ② B 국가에서는 일부의 사람들이 조세 정책에 반발할 수도 있겠군.
- ③ C 국가에서 조세부담률이 낮아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겠군.
- ④ D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높아서 수준 높은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겠군.
- ⑤ E 국가가 최근 조세부담률을 낮춘 것을 보면, 경제 안정 정책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겠군.

19.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나는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②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아 주위가 어지러웠다.
- ③ 영희는 용돈을 절약하여 남은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샀다.
- ④ 그의 첫인상이 나에게 오래도록 남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 ⑤ 은수는 아직 공부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06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 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 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 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불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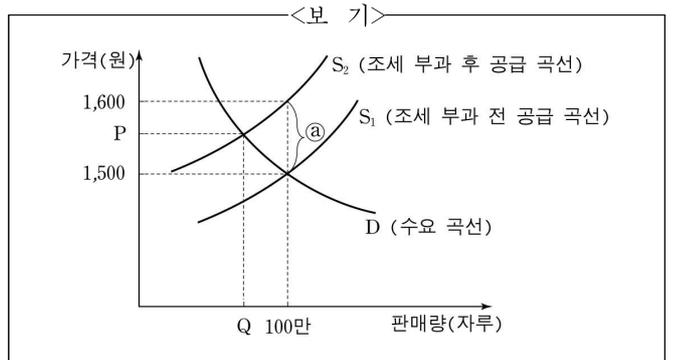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 하든 ①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 되든 ②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3.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 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44.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a를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₁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45. ㉠,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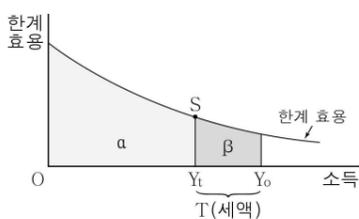
- ① ㉠: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② ㉠: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 ③ ㉠: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④ ㉡: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 ⑤ ㉡: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원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그리고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② 산출된다.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한계 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 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밖에도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인 평균 세율,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인 실효 세율 등이 있다.

[A] 다음 예를 통해 세율에 대해 이해해 보자. 소득세의 세율이 과세 표준 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0%,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20%라 하자. 이처럼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1천만 원×0.1(10%) + 2천만 원×0.2(20%) = 5백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평균 세율은 약 16.7%(5백만 원/3천만 원)가 된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된다.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리주의자 밀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므로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즉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보았다. 이를 균등 희생 원리라고 하는데, 밀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누진 세율 구조를 ③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희생이란 세액 자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효용의 감소분이다. 그런데 밀은 균등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논하지 않았다. 이에 후대 학자들은 균등의 의미를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고 효용은 측정 가능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에 ④ 입각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림>

균등한 희생과 관련 있는 세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소득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1단위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_0 였던 사람이 세액 T 를 내면 세 후 소득이 Y_1 로 줄어든다. 이때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β 로 나타낼 수 있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들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누진 세율 구조라고 ⑤ 단정하기 어렵다. 절대 희생 균등 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은 1% 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만 누진 세율 구조가 ⑥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누진 세율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이는 <그림>에서 면적 β 를 면적 $\alpha + \beta$ 로 나눈 값인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 아래에서 누진 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지만 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반드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비례 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만 한다. <그림>에서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선분 YS 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이 길이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과세 이전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효용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

*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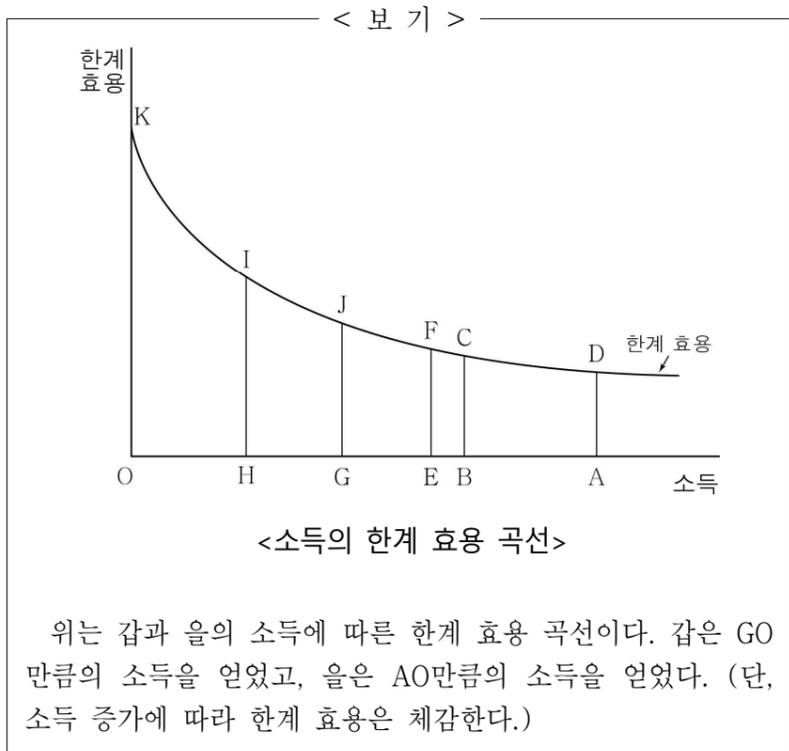
1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본질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 부과와 효율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누진적 조세 부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조세 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며 조세 행정의 목적을 효율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세율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조세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제시하고 조세 부담에서의 균등한 희생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1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평균 세율보다 실효 세율이 더 낮다.
- ② 납세 부담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 ③ 대다수 국가가 소득세에 비례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 ④ 세액 산출 시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누진 세율 구조인지의 여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갑과 을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 ②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과 을이 내야 할 세액이 각각 GH와 AB라면 GHIJ의 면적과 ABCD의 면적이 같아지도록 GH와 AB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 ③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AEFD/AOKD일 때에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과 동일해진다 면 을에게 AE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 ④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이고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B일 경우 GH를 GO로 나눈 값과 AB를 AO로 나눈 값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 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의 세액이 GH라면 을의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이 HI가 되도록 을에게 AH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낮은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②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③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만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④ 동일한 소득이라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20.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소득세 제도			
과세 표준	(가)	(나)	(다)
100만 원	10만 원	3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6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30만 원	90만 원	60만 원

위에 제시된 표는 어떤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소득세 제도 (가)~(다)와 그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다. (단, 과세 표준은 위의 3가지 경우만 있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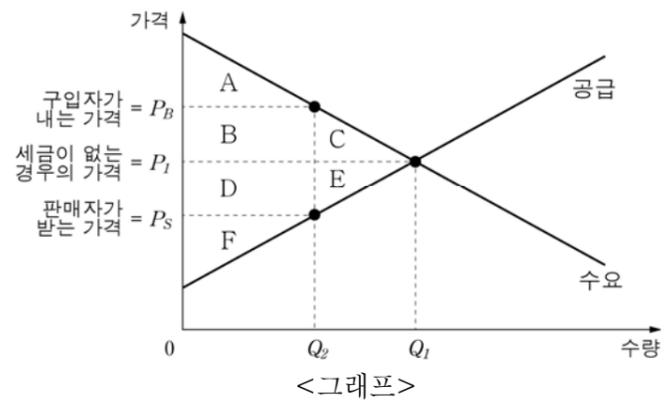
- ① (나)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② (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역진 세율 구조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모든 과세 표준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④ (나), (다)와 달리 (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세율 구조이다.
- ⑤ (가), (나)와 달리 (다)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세율 구조이다.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산하여 냄.
- ② ㉡: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
- ③ ㉢: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섬.
- ④ ㉣: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 ⑤ ㉤: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득이 감소하는 양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프>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점에서의 균형 가격은 P_1 이고 균형 거래량은 Q_1 이다. 균형 가격 P_1 , 균형 거래량 Q_1 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게 되는 이득이 극대화된다. <그래프>의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위에 있는 $A+B+C$ 이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은 생산자의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아래, 공급 곡선 위에 있는 $D+E+F$ 이다. 이때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A+B+C+D+E+F$ 이다.

<그래프>에서 ㉠ 세금이 $\overline{P_S P_B}$ 만큼 부과되면, 시장은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난다.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P_1 에서 P_B 로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는 A 가 된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P_1 에서 P_S 로 낮아져 F 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거래량은 Q_1 에서 Q_2 로 감소한다. $\overline{P_S P_B}$ 에 Q_2 를 곱한 값인 $B+D$ 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 이때 B 는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 D 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다. 세금 부과 후의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조세 수입의 합인 $A+B+D+F$ 이다.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세금 부과로 인해 총 잉여가 $C+E$ 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E$ 는 총 잉여의 감소분으로 경제적 순수실이라고 한다.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수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한 지표이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큰 폭으로 변할 때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대체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다. 수요 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공급 곡선과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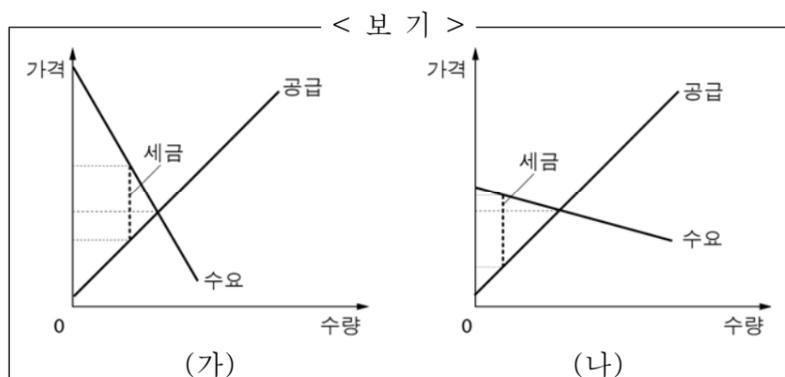
세금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경제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 부과가 커다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한다. 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 소비자 잉여: 구입자의 지불 용의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 * 생산자 잉여: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의 판매 용의 금액을 뺀 나머지.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개념과 의미가 변천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의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③ 조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 부과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 ⑤ 조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는 동일한 크기의 세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세금 부과 이전의 (가), (나)의 균형 거래량은 동일했다. (가), (나)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가), (나)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 ① 생산자 잉여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② 정부의 조세 수입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③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④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⑤ (나)의 수요는 (가)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부가 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의 정도가 높아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로 인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은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은 식료품, 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에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최근 부가 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면세해 준 것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게 한 것이겠군.
- ②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들까지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면세 범위를 넓히면 그 상품들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겠군.
- ③ 부가 가치세의 부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겠군.
- ④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에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면 그 상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정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겠군.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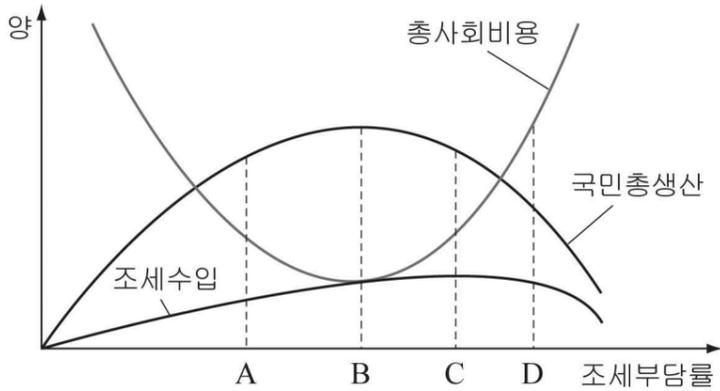
< 보 기 >

㉠.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 시장 거래량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다.
 ㉣. 정부의 조세 수입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보다 커진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44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복지 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조세를 부과하는데,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부담률이 높을수록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나 일정한 조세부담률 이상부터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B점까지는 조세부담률을 높일수록 국민총생산은 증가한다. 국가가 조세수입으로 각종의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이 정도의 조세부담률에서는 국민총생산을 줄일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B점을 넘어서면 국민총생산은 줄어들 수 있다. 높은 조세부담률에서 사람들의 근로 동기나 저축 동기가 약해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 투자가 줄어들고, 기업들도 노동 비용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수입은 국민총생산이 증가할수록 과세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률이 B점을 지나 국민총생산은 줄어들어도 C점까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 B점을 지나면 국민총생산이 줄어 과세 대상은 줄어들지만 조세부담률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C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조세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국민총생산이 크게 떨어지고 각종 절세나 탈세의 방법으로 조세를 기피하려는 노력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총생산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의 재원도 줄어들어 경제와 복지 둘 다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총사회비용도 조세수입과 국민총생산에 따라 변화한다. 총사회비용은 국민총생산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비용 부분과, 조세의 비효율로 인해 생기는 국민총생산의 감소 부분을 합쳐서 구성된다.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조세수입이 적어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를 못해 총생산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총사회비용은 커져서 비효율적이게 된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점점 높아지면 조세의 비효율성이 줄어들어 총사회비용이 줄어들다가 B점에서 최저가 된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된다. 왜냐하면, 조세의 비효율성이 다시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가? 이것은 국가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국가와 옹호하는 국가가 서로 정책이 다른 것처럼 조세부담률도 다르기 때문이다. 적정 조세부담률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들에서의 적정한 조세부담률은 상당 부분 이념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4. 위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 ① 조세수입은 사회 복지 정책의 재원이 될 수 있다.
- ②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적정한 조세부담률은 없다.
- ③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④ 조세수입은 국민총생산과 조세부담률에 의해 결정된다.
- ⑤ 국민총생산은 사람들의 근로, 저축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45. 위 글로 보아 <보기>의 A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국은 지난 20여 년간 고도로 발전된 사회 복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조세부담률이 총생산 감소의 원인임을 알면서도, 사회 복지 정책을 축소할 수 없어 조세부담률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

- ① 조세부담률이 비효율적일 것이다.
- ② 복지국가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 ③ 경제와 복지 둘 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④ 국민들이 조세를 기피하려는 노력이 많이 할 것이다.
- ⑤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경제적 여건이다.

46. <보기>는 두 집단의 주장이다. 각 집단에서 인식하고 있는 조세부담률의 현재 수준을 그래프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지문의 그래프를 이용할 것.)

< 보 기 >

조세부담률을 낮추면,

- ㉠ 집단 :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조세수입도 줄어들 것이므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 ㉡ 집단 :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조세수입은 늘어날 것이므로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

- | | | |
|---|---|---|
| | ㉠ | ㉡ |
| ① | A | D |
| ② | B | D |
| ③ | C | A |
| ④ | C | D |
| ⑤ | D | B |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 LEET

‘좋은 세금’의 기준과 관련하여 조세 이론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거론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능력 혹은 자신이 받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공정한 세금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세는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여 조세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손실 또는 비용, 즉 초과 부담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세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19세기 말 ㉠ 헨리 조지가 제안했던 토지가치세는 이러한 기준에 잘 부합하는 세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토지 소유자의 임대소득 중에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한 불로소득이 많다면, 토지가치세를 통해 이를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권과 처분권 그리고 수익권으로 구성되는데, 사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수익권 중 토지 개량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환수하여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자는 것이 토지가치세의 기본 취지이다. 조지는 토지가치세가 시행되면 다른 세금들을 없애도 될 정도로 충분한 세수를 올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가치세가 토지단일세라고도 지칭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토지단일세가 다른 세금들을 대체하여 초과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토지단일세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영역에서는 자유 시장을 옹호했던 조지의 신념에 잘 부합하는 발상이었다.

토지가치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부합하는 세금이다. 조세 이론은 수요자와 공급자 중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많은 납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토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점에서 비탄력적이며 따라서 납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토지가치세는 공정한 세금이 된다. 한편 토지가치세는 초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통상 어떤 재화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는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과 함께 초과 부담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과세하면 자동차 거래가 감소하고 부동산에 과세하면 지역 개발과 건축업을 위축시켜,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가치세는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아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토지가치세 도입에 따른 여타 세금의 축소가 초과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G7 대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초과 부담의 감소 정도가 GDP의 14~50%에 이른다.

하지만 토지가치세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토지가치세는 이론적인 면에서 호소력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에 대한 세금이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토지에 대한 세금이어야 하나 이러한 토지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토지가치 상승분과 건물 가치 상승분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한다. 토지를 건물까지 포함하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그에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격이 별도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치 평가가 어렵다. 조세 저항도 문제가 된다.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 토지가치세를 도입하더라도 세율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가치세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조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도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백 년 전에는 부의 불평등이 토지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컸지만, 오늘날 전체 부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세기 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토지 소유의 집중도 또한 조지의 시대에 비해 낮다. 따라서 토지가치세의 소득 불평등 해소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오늘날 토지가치세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외부 효과’와 관련이 깊다. 첨단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지역 주변에는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지만 임대료가 급등하고 혼잡도 또한 커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사유화하는 반면, 임대료 상승이나 혼잡비용 같은 손실은 지역민 전체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량되지 않은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은 불로소득으로 여겼다.
- ② 토지가치세로는 재정에 필요한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토지의 처분권은 보장되되 사용권과 수익권에는 제약을 두자고 주장하였다.
- ④ 토지가치세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보았다.
- ⑤ 모든 경제 영역에서 시장 원리를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밑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를 도입한다면, 외부 효과로 발생한 이익의 사유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자동차세의 인상이 자동차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는 세수 증대에 효과적일 것이다.
- ③ 토지가치세가 단일세가 되어 누진세인 근로소득세가 폐지된다면, 고임금 근로자가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 ④ 조지의 이론을 계승하는 학자라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 ⑤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토지가치세의 도입으로 토지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문제가 해소되어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1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X국은 요트 구매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치세를 도입하여 부유층의 납세 부담을 늘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부자들은 요트 구매를 줄이고 지출의 대상을 바꾸었다. 반면 요트 생산 시설은 다른 시설로 바꾸기 어려웠고 요트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대량 해고되었다. 아울러 X국은 근로소득세를 인상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였다.

○ Y국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목표로 담배세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담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정부의 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 ①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토지가치세와 달리,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는 소비자에게 부과되고 있군.
- ②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는 X국의 '사치세'와는 달리, Y국의 '담배세' 및 토지가치세는 초과 부담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군.
- ③ 과세 대상자 이외의 타인에게 납세 부담이 추가되는 X국의 '사치세'와 달리, Y국의 '담배세'와 토지가치세에서는 납세 부담이 과세 대상자에게 집중되는군.
- ④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만들 수 있는 토지가치세와 달리,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는 탄력도가 높은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하는군.
- ⑤ 조세 개편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와 달리, 토지가치세는 도입할 때 거둘 수 있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최근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군.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06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①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2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31.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과제 : ‘㉠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 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고 할 수 있으므로

㉠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3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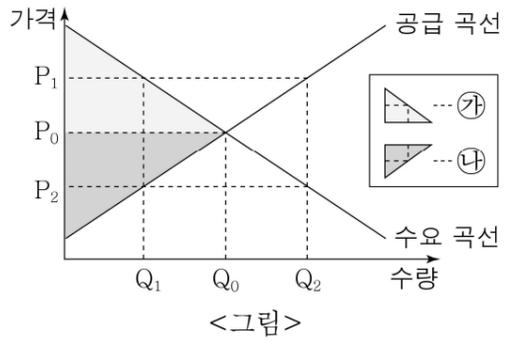
3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로,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₀에서 형성된다. 재화의 가격이 P₁로 올라가면 수요량은 Q₁로 줄어들고 공급량은 Q₂로 증가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P₂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Q₂로 증가하고 공급량은 Q₁로 줄어든다.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으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이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한 가격과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차이이다.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은 소비자 잉여를, 실제 재화의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에 해당하는 ㉡은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만일 재화의 가격이 P₀에서 P₁로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는 반면, 재화의 가격이 P₂로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이 500원/kg이고, 국제 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의 가격이 300원/kg이라고 가정해 보자. K국이 자유 무역을 통해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면 국산 밀가루 가격은 수입 가격 수준인 300원/kg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 결과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수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밀가루를 수입하기 전에 비해 커지게 된다.

그런데 K국이 수입 밀가루에 100원/kg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밀가루의 국내 판매 가격은 400원/kg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산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 부과 전보다

100원/kg 오른 가격에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국산 밀가루의 공급량이 늘어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밀가루 생산자의 이익을 늘려 자국의 밀가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하게 되어, 국내 소비자들은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된다면 K국의 경기는 결국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1930년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 대공황이 심화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관세는 국제 교역을 감소시켜 국제 무역 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두 입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 ② 문제 상황을 언급한 후 해결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이론의 한계를 단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④ 학설이 나타난 배경과 그 학문적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 ⑤ 원리를 설명한 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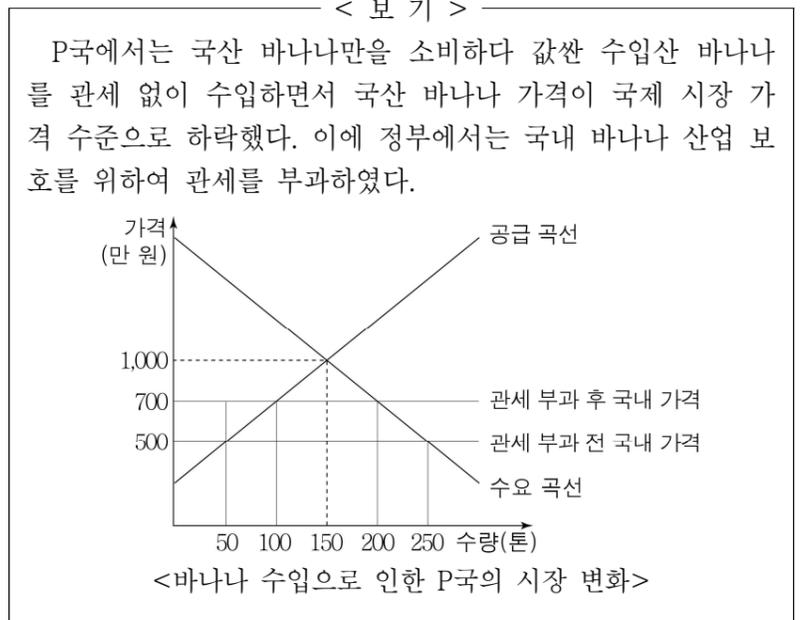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
- ② 균형 가격에서는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다.
- ③ 원료의 가격은 이에 기반한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 ④ 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40.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과 같기 때문에
- ②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 ③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 ④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기 때문에
- ⑤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기 때문에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톤당 1,000만 원이었다.
- ②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
- ③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 톤당 200만 원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 ④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 ⑤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42. 윗글의 '관세(A)'와 <보기>의 '수입 할당제(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수입 할당제'는 일정 기간 특정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여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 무역 상태에서 수입하고 그 할당량이 채워지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비관세 정책이다. 수입 할당제는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그 재화의 국내 가격을 자연스럽게 상승시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① A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겠군.
- ② B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하겠군.
- ③ A는 B와 달리 정책 시행 시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보겠군.
- ④ B는 A와 달리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없겠군.
- ⑤ A와 B 모두 국제 무역 규모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겠군.

[39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 간의 경제 거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래는 국제무역이다. 각 나라의 정부는 무역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방임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입을 규제하거나 수출을 지원하는 등 무역에 개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을까?

수입 규제 수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 관세와 ㉡ 수입 수량 할당이다. 관세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량도 감소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관세 없이 자유롭게 수입하다가 정부에서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수입 농산물의 국내 가격은 관세를 더한 만큼 높아져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수입 수량 할당은 일정 기간의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에서는 국내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족한 만큼을 수입할 수 있다. 이때의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고 시장거래량은 수요량과 일치한다. 그런데 수입 수량을 제한할 경우에는 수입이 자유로운 경우보다 수입량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포도주의 국내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생산량을 늘리거나 초과수요만큼 수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생산량에 변함이 없고 수입도 일정량만 할 수 있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의 포도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수입 수량 할당이 적용되거나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 상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분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입이 되는 반면에 수입 수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이윤이 된다.

한편 현실 경제에서는 관세를 인하고 수입 수량 할당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나 기업의 경우는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경제에서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국제 거래에서도 흑자가 바람직하다. 수출이 잘되어 생산이 늘면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흑자는 국내 경기를 과열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고 거래 상대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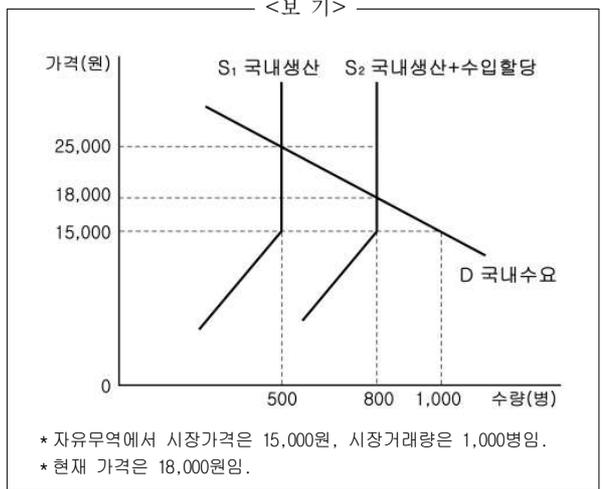
39.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부가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 경우에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겠군.
- ② 정부가 수입을 규제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늘린다면 국제 거래 상대국과의 마찰을 없앨 수 있겠군.
- ③ 국제 거래에서 장기적인 흑자를 기록한다면 국내 상품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물가가 안정되겠군.
- ④ 무역 활동 가운데 정부가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은 미리 정해져 있겠군.
- ⑤ 수출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의 입장을 취하는 나라가 더 많겠군.

40. 위 글을 통해 ㉠과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수입 억제 효과가 크다.
- ② ㉡은 ㉠에 비해 수요량 감소 효과가 크다.
- ③ ㉡이 ㉠보다 현실 경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 ④ ㉠과 ㉡ 모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 ⑤ ㉠과 ㉡ 모두 가격 상승에 따른 이윤을 정부가 얻게 된다.

41. <보기>는 [A]에 제시된 포도주의 수요 및 공급에 따른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포도주 가격이 25,000원이 되면 공급량은 현재보다 늘어난다.
- ② 포도주 수입 할당량을 줄인다면 S₂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 ③ 현재 포도주의 수입량은 가격에 상관없이 300병으로 한정되어 있다.
- ④ 포도주를 전혀 수입하지 않는다면 시장 가격이 25,000원에서 형성된다.
- ⑤ 포도주의 수요가 일정하다면 수입 할당량을 늘릴 경우 가격은 18,000원보다 하락한다.